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내일 표결... 여야 심법 분주

민주, 체포안 표 나뉠 경우 분열 야기...당론 아닌 총의 모으는 방식 대응 국힘, 체포안 찬성·총리 해임안 반대 당론...해임안은 표결 불참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 처리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야의 심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부결 주장이 부상하고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가결을 통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는 각기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겠다고 한 만큼 각자 모임 성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0일 오전 조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본래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결산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상황을 고려해 현안 회의로 변경됐다.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이날 오전 지도부에 가부결을 떠나 한 가지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에서 표가 나뉠 경우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으는 방향으로 체포동의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별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모임별 의견을 듣거나 본회의 전까지 의원 총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총의를 모으더라도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가결을 당부하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1년이 넘게 지속된 여야의 사법리스크 공방으로 민심의 피로도가 깊은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야에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대회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김종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한국의희망' 양항자 공동대표, 정의당 '세번째권력' 조성주 공동대표.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친분·재산신고 누락 공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나"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이다.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도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 "후보자 지명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 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원 해의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히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라임 환매'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피해액 1258억 인정... "도주 계획 발각 등 엄중 처벌 필요"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사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르발'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

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호지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호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됐다.

사법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다문화 2세대 공부방 만들기·집수리 봉사활동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다문화 가족과 2세대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회진출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최근 광주고려라이온스클럽과 함께 광주 남구 대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공부방 만들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재능기부센터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2세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노 소장 등에 도움을 요청

해 이뤄졌다.

노 소장은 광주재능기부센터와 함께 지역봉사단체,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집 정리부터 도배, 장판, 창문과 책상 등 가구를 교체해 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노 소장은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11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다문화 학생수도 16만80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수의 3.2%를 차지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세에 있다"면서 "다문화 가족은 물론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